

점검! 국내 제과학원 구조 재편기

직업교육 개혁, 시장 개방으로 큰 변화 예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나섰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 신설될 관련법에 따라 제과학원의 시장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과 학원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지난달은 제과학원마다 1년과정의 3월 정규반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 강의 준비에 바쁜 달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은 듯했다. 수강률이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학원과 관련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틀이 바뀔에 따라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또한 올해부터 95년 전문학원 시장 일부 개방, 96년 일반학원 시장 개방에 이어 제과제빵 학원을 비롯한 전문학원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제과학원의 경쟁력이 크게 뒤흔쳐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응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과학원계는 관련 법안의 개정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뿐 외국학원 진출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직업교육 개혁 작업이 기술전문학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개정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 확정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국내여건 불리, 외국학원 진출 '주춤'
현재 국내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외국학원은 프랑스 코르동 블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외국의 제과제빵학원이 국내 진출에 주춤하고 있는 데는 현재 국내 학원시장 구조 때문이다.

먼저 수강료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원법에는 관할 부서장인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정부의 사교육비 억제 방침으로 학원 수강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학원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술전문학원은 입시학원 등 일반학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강료 인상폭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 왔지만 재료비, 설비 감가상각비를 수강료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기술전문학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강생수가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한 건물, 설비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도

높아 국내 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 학원이 외국학원 진출에 대해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코르동 블루가 지난해 6월 청구그룹과 기술을 제휴해 국내 베이커리 시장에 뛰어들자 국내 제과학원계는 97년 전문학원시장 개방을 염두하고 학원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올해 본격적인 진출이 예상됐던 코르동 블루는 앞서 설명했듯 국내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사업의 국내 파트너도 애초 기술제휴를 맺은 청구가 유력시됐지만 삼성그룹 중앙개발이 협상 과정에 참여, 어디로 결말이 날지 예측 불허다. 현재 코르동 블루는 아시아 극동지역 지사장을 자주 한국에 보내 시장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며 뒤늦게 협상에 참여한 중앙개발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 코르동블루는 동경에 한 곳이 있는데 2개월, 6개월 교육과정이 있고 6개월 과정의 경우 한 기수당 200명 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위해 관련법안 정비 나서

국내 학원가의 최대 관심 사항인 학원 관련 법안은 하나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회 계류 중에 있거나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지난해 ‘5. 31 교육개혁안’ 발표 후 후속작업으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법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지식 인력개발사업법, 교육기본법 등이고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취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전문학원을 일반학원과 분리, 관리하며 민간자격의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말 그대로 직업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

현재 제과학원계는 관련 법안의 개정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뿐 외국학원 진출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직업교육 개혁 작업이 기술전문학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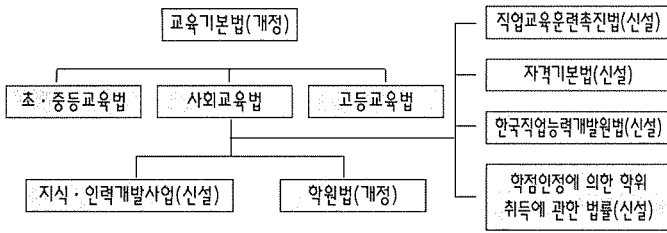
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학원, 직업훈련원 등을 말하는데 제과제빵 등 기술전문학원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시행령을 통해 정부 지원 대상이 선별되었지만 일단 법에 기술전문학원이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제과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통로가 마련된 셈이다.

자격기본법은 기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00여종의 국가자격 중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민간으로 이양해 단체, 법인, 개인 등이 국가에서 평가 인정받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텃다. 제과학원계에서는 현행 제과제빵 기능사도 민간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든 교육부 산업교육총괄과 류정섭 사무관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속에 민간자격 가능 직종 및 민간자격 시행자의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지 않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격을 공신력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서 시행한다면 민간자격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은 민간자격의 등록, 접수 및 평가, 인정하는 역할 담당과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시 전형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독학사와 같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교육 위주로 편성된 현행 교육법이 손질돼 새로운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원론적인 사항이 포함되고, ‘지식 인력개발사업법’이 신설돼 기존 전문학원과 일반학원 모두를 포괄했던 것에서 탈피, 기술전문학원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학원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표 1〉 정비 중인 학원관련법 체계



〈표 2〉 국회 통과, 상정된 학원관련법

명 칭	주요내용	비고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기 본 계획 수립 및 이에 소 요되는 비용 지원	· 국회 상정. · 현행 산업교육진 흥법 중 직업교육 훈련촉진법과 상 충되는 부분은 폐 지.
자격기본법	· 민간자격을 평가, 인정받 고자 할 경우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조사, 연구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직업 교육훈련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국가자격, 국가에서 평가 인정받은 민간자격은 학 점으로 인정.	· 국회 상정. · 현행 국가기술자 격법 제 5조는 자 격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정.
한국직업능력 개발원법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 책 연구·개발, 자격제도 조사·연구, 직업교육훈 련기관에 대한 평가·인 정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설립. · 민간자격의 등록·접수 및 평가·인정	· 국회 상정. · 한국교육개발원,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업무 중 이와 중 복되는 부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으로 이관.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사회교육시설,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 습과정에 대해 학점 인정. · 일정한 학점 인정 받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교육 부장관 학위 수여.	· 국회 통과. · 기존 독학사 학위 취 득과 유사.

제과학원에 유리한 환경 조성될 듯

이렇듯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자 제과제빵 등 기술전문학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체계가 필요하며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등 인접 교육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기술전

문학원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명칭을 '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상급학교에 편입학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과학원업계는 이번 정부의 관련 법안 손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이 확정돼야 이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규호 전국제과기술학원협의회장은 "시행령에 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달라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생력 키우기 하나, 학원간 협력 강화

한편 정부의 학원 관련법 정비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서 기다리지만 말고 현재 국내 제과학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원관련법의 정비는 외국학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 이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에 더욱 그렇다.

국내 제과학원의 문제점으로 우선 학원의 난립을 들 수 있다. 2, 3년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한 제과학원은 현재 전국에 30개 이상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수강료가 정부시책에 따라 일정하게 묶여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제



▲ 현업 종사자들의 열띤 참여로 해외 기술자 초청 세미나는 성황을 이룬다.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과업에 입문하는 수도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복지관, 백화점 문화센터, 가스오븐 업체 등에서 제과제빵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반영, 주부강습 프로그램에 제과제빵 과정을 앞다투어 신설하면서 기존 제과학원의 취미반, 주부반 신규 수요층을 흡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전전문대가 제과제빵과를 신설한 이후 창원전문대를 포함, 몇몇 학교에서 제과제빵과 신설을 준비 중이거나 경민전문대처럼 기존 식품관련학과에 제과제빵 과정을 추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과학원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규호 회장은 “영세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상충되는 부분은 줄이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극대화하기 위해 2개 학원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학협동이 미흡한 것도 제과학원을 둘러싼 문제점 중의 하나다. 제과선진국 유럽의 경우, 제과기술교육이 제과제빵 업체의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과점, 제빵회사 등 직장에 다니면서 업체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과제빵 분야의 산학협동이 극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주, 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제과학원계는

이번 정부의 관련 법안 손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이 확정돼야 이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과제빵기능사에 대한 우대가 거의 없다시피해 자격증의 효용가치가 극히 떨어져 있다. 자영제과점을 차릴 때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럽의 경우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자영업자의 자격증 의무화는 둘째치고라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기업체의 경우 생산직 간부 승진시 자격증 취득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생력 키우기 톨, 현업 기술인 대상 과정 신설

제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교과과정의 단순성과 획일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제과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1년의 전문 기술인 양성 과정과 함께 취미를 위한 속성반(기초반), 주부반 그리고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업 종사 기술인을 대상으로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대부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외국 학원과 경쟁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국 학원이 진출했을 때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수월하게 접근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 기술자로 강사진을 갖춘다면 그 수요는 분명하다. 몇몇 대도시 제과학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해외 기술자 초청 세미나의 열기는 이를 증명한다.

이와 관련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의 정운용 부장은 “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려 해도 고급 강사진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강사진의 자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양성된 고급 강사진으로 초급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균형있게 운영했을 때 전문학원다운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기술자 초청 세미나가 외국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단발성에 그쳐 체계적인 기술습득이 힘들고 자칫 ‘기술



▲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가 미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제과제빵기능 시험 실기시험 모습.

중속'으로 호를 위협이 있기에 외국의 기술을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사진의 양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인다.

자생력 키우기 셋, 프로그램의 다양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 내용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학원의 특성상 제과제빵 이론 및 실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외에도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원 수료 후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기술 교육 외에 제과점 경영에 관한 기초 실무를 지도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판매·시설관리·원부재료 특성 실험 등을 다방면으로 가르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기본 과정 외에 일반적으로 특수반으로 두고 있는 데커레이션반, 화과자반, 디저트반 등에서 나아가 다양한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면 타 제과학원과 연계, 서로 중복되지 않게 과정을 만들고 이를 상호 홍보하거나 강사진을 교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강사진이 부족하다면 과목에 맞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존 수강생에게 새로운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현업 종사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제과기술학원의 모습은 현재의 과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학원은 지난 1월부터 교과과정을 새롭게 개편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선보인 프로그램은 기존 현직 종사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을 강화해 체계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보자에게도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과정 외에 초급 데커레이션, 중급데커레이션, 화과자 양과자, 초컬릿 한과 설탕공예, 마지팬 머랭 운빼이, 고급 데커레이션 등 6개 과정이 신설됐는데 각 과정의 교육기간은 1개월로 정해졌다. 1월부터 6월까지 순서대로 6개 과정이 매달 주제를 달리해 진행되고 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자체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매월 해당 과정이 끝날 때마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고

정부의 학원 관련법 정비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학원관련법의 정비는 외국학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 이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에 더욱 그렇다.

있다.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오병호 과장은 "6개월 전과정을 수료했을 때 외국에서 2년간 연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외국 학원의 진출에 대해 "국내 학원 출신이 외국학원 출신보다 더 나은 실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질과 양을 충실히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변화에 대비 능동적인 자세 필요

제과학원을 둘러싼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교육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직업교육개혁 방안은 후자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 제과학원업계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제과학원간의 제휴 확대 등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과학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기 이후 제과학원업계가 어떤 모습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글/ 손인수)



▲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